

< 민간경제 활력을 통한 중장기 재정 확보 >

- 일본의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의 시사점 -

9대 사회 안전망 추진

- ▷ 일본은 저성장 기조 지속,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진행 등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
- ▷ 9대 사회 안전망 구축 추진
 - 차세대 육성 지원, 고령자 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 구축, 고용의 미스 매칭 축소, 청년층 능력 강화, 노동 환경 정비, 지속가능 의료 확보, 국민 건강 증진, 장애인 정책 및 지역 복지 추진, 의약품 및 식품 안전성 확보의 9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9대 사회 안전망 전략 추진에 있어서의 장애

재정 기반 취약

- ▷미래 재정 기반 취약
 - 2005년 이후 인구 감소 장기 지속
 - 2050년 고령자 인구 36%
 - 납세자 규모 축소로 인한 재정 수입 기반 약화

- ▷재정적자 누적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005년 예산 기준 6.0%
 - GDP 대비 장기국가 채무 비율 2005년 예산 기준 151.2%
 - 재정 지출 확대 곤란

- ▷저성장 기조 정착
 - 2002년부터 경제는 2%대의 저성장 시대에 돌입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

9대 사회 안전망 전략 추진을 위한 중장기 재정 확보 전략 필요

중장기 재정 조달 전략

공공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성장 달성

- ▷2001년 1/4분기 이후 공공투자 삭감 지속(2005년 3/4분기 제외)
 - GDP 대비 공공투자 증가율은 2001년 1/4분기 -6.3%를 시작으로 2005년 2/4분기 -3.4%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민간 주도 성장 체제 구축
 - 민간 소비는 2002년 4/4분기 2.1% 증가를 시작으로 플러스 성장 지속
 - 경기 회복의 官需의존형 경제에서 民需의존형경제로 탈바꿈
- ▷2002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 달성
 - GDP 성장률은 2002년 3/4분기 1.3%를 시작으로 2005년 3/4분기 2.9%까지 플러스 성장

정부 구조 개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 ▷공무원 개혁
 - 2011년까지 국가 공무원 5% 이상 삭감
 - 2011년까지 지방공무원 4.6% 이상 삭감
 - 현행 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를 1/2수준까지 축소
- ▷특수법인 등 개혁
 - 163개 법인 중 118개 법인에 대한 정리 및 합리화 추진
 - 8개 정부계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검토 및 추진
- ▷중앙과 지방 정부 관계 개혁
 - 국고보조부담금 개혁
 - 지방정부에 대한 세원 이양
 - 지방교부세 개혁
 - 市町村 합병 추진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 ▷官業(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의 민간 개방
 - 시장화 테스트 도입
 - 시장 실패 보안을 위한 정부 제공 공공재에 대해 '官民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뛰어난 경영 주체가 해당 공공재를 제공함
- ▷규제개혁을 통한 이용자 효용 창출
 - 1990년대 이후 2005년 3월 현재 1,131개 규제개혁
 - 2002년 기준 이용자 효용은 연간 약 14조 3천억 엔 증가
 - 국민 1인당 11만 엔의 경제적 효과 창출

한국형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재정 조달 전략 필요

시사점

-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 필요
-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를 선진 경제 발전 이념으로 정립

전략수립 기본방향

- ▷정부의 숭선수법을 통한 국민 참여 유도
 - 작은 정부 추진에 의한 정부 비대화 방지, 효율성 제고, 재정 지출 억제 등 정부의 숭선수법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官業 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활용
 - 과감한 '新公共經營(官業의 민간 개방에 의한 민간 활력)' 추진으로 민간 활력을 활용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이 보다 뛰어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정부 혁신을 통한 국민 참여 유도

-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비용 상쇄
 -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이용자 효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조정 비용을 상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규제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 비용 상쇄

□ 민간경제 활력을 통한 중장기 재정 확보

- 일본의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의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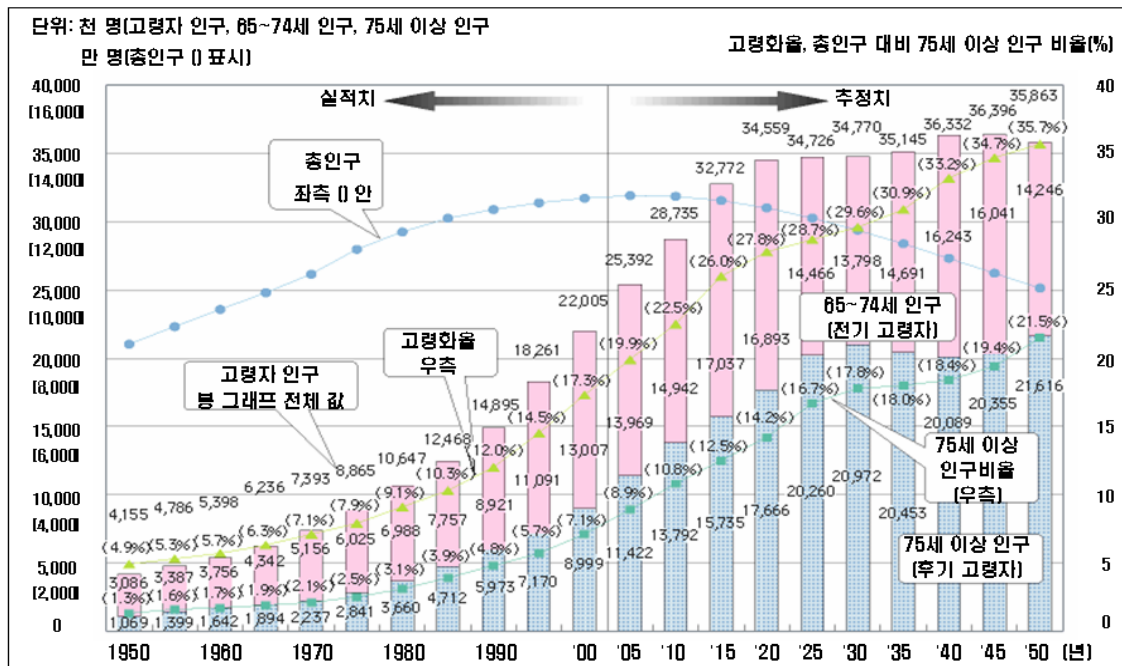
1. 일본의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과 약한 재정 기반

○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 추진과 문제점) 약한 재정 기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9대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약한 재정 기반) 현재 일본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진행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2005년 이후 일본의 인구는 장기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래의 재정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

< 일본의 인구 추이 >



자료: 日本 総務省, '国税調査' 각 년도; 国立社会保険・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人口推計', 2002년 1월.

- 재정적자 누적: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1991년 0.9%에서 2000년 8.0%, 2005년에는 6.0%를 기록, 이로 인한 장기 채무는 1991년 약 2,781억 엔(GDP 대비 58.9%)에서 2005년 약 7,735억 엔(GDP 대비 151.2%)로 급증하여, 정부 재정 지출에 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무리임
- 저성장 기조 정착: 한편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는 경제성장률을 보면 2000년 2.8% 성장 이후, 2001년 -0.8%, 2002년 1.1%, 2003년 2.3%, 2004년 1.7% 등으로 2% 전후의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및 장기 채무 비율 추이 >

(단위: %, 억 엔)

구 분	1991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
재정적자	0.9	6.6	8.3	8.0	6.1	7.7	7.7	6.1	6.0
장기채무	58.9 (2,781)	82.0 (4,101)	118.2 (6,003)	125.9 (6,459)	134.4 (6,731)	140.4 (6,980)	138.0 (6,916)	146.5 (7,402)	151.2 (7,735)

자료: 日本 財務省; OECD, *Economic Outlook*, Vol.77, 2005. 06.

주: 본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장래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값임.

○ (부각된 중장기 재정 확보 전략) 한편 일본 정부는 약한 재정 기반 하에서 차세대 육성 지원, 고령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구축, 청년층 능력 강화 등 9대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중장기 재정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9대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의 특징) 차세대 육성 지원, 고령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구축, 청년층 능력 강화, 지속가능 의료 확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외 전략들의 세부 정책 중 상당수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대응 전략임

- 문제점: 단, 약한 재정기반 하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는 힘들며, 따라서 이들 9대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확보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일본의 9대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 >

9대 전략	정 책	세부 정책
차세대 육성 지원	차세대 육성 지원 정책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
		자녀·육아 응원 플랜
		관련 법 체제 정비
	가정 폭력 대책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고령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구축	연금 제도 개혁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 사회보험청 개혁
	고령자 고용 촉진	65세까지 고용 확보 중·고 연령층 재취업 원조 및 촉진 취업 등 다양한 사회 참가 촉진
	고령자 간병 보험	예방 중심 간병 정책으로의 전환
	지역 고용 창출 지원	지역 제안형 고용창조 촉진사업 등
고용 미스 매칭 축소	官民 공동 연계 취직 지원	시장화 테스트 등 모델사업 추진 등
	노동 이동 및 인재 확보	건설, 항만 등 취약층 노동자 지원
	노동 환경 정비	외국인 고용 환경 정비 등
	청년 자립·도전 플랜	일본판 듀얼(실무·교육 연결형 인재 육성 시스템) 추진 등
청년층 능력 강화	청년 능력 강화 프로젝트	青年自立塾, 취업 및 정착 지원 등
	수요지향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주 주체 교육훈련 지원 등
	커리어형성 지원 조건 정비	직업능력평가제도 도입 등
	노동 조건 확보 및 개선	법정 노동시간 준수 확립 등
노동 환경 정비	다양한 노동 형태 지원 환경 정비	일과 생활의 조화,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의 안정적 운용 등
	노동 현장 환경 개선	노동재해 방지 강화, 노동자의 건강 확보 등
	차별없는 노동 환경 조성	여성의 능력 발휘 지원 등
	안정된 노사 관계 구축	노동위원회의 심사 제도 개선 등
	지속가능 의료보험제도 추진	의료비 적정화 추진 등 의료보험제 도 개혁 추진
지속가능 의료 확보	의료 제공 체제 개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료 추진, 의료 기관의 기능 분화 및 연계 등
	정책 의료 추진	국립 고도 전문 의료센터 등 국가 의료기관의 정책의료 추진 등
	건강 일본 21	생활습관병 대책 추진, 여성의 암 긴급 대책, 간병 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	난치병 및 감염증 대책	류마티즘, 알레르기, 에이즈, 한센병 등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적극적인 과학기술 개발	건강 프론티어 전략 추진 등
	장애자 고용 촉진	장애자 고용율 제도 추진을 통한 고 용 기회 확대 등
장애자 정책 및 지역 복지 추진	다양한 장애보건복지 정책 추진	장애자 자립 지원 법안 제출, 발달장애 자 지원 정책 추진 등
	사회적 빈곤층 지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
의약품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확보식품 안전성 확보 등	

자료: 日本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白書, 2005年版에서 내용 발췌·정리.

2.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조달 전략

○ (공공투자 삭감) 2002년부터 코이즈미 내각은 공공투자를 삭감하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장기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음

- (공공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성장 달성) 코이즈미 내각은 2002년부터 공공투자를 삭감해 왔으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공공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성장을 달성함

- 공공투자 삭감: 코이즈미 내각은 2001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투자를 감소시켜 왔음(단, 2005년 3/4분기는 플러스)
- 경제는 플러스 성장: 이러한 공공투자의 대규모 삭감에도 불구하고 2002년 3/4분기 이후 2005년 3/4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공공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성장
- 민간주도 성장 체제 구축: 한편 민간 소비는 2002년 4/4분기부터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3/4분기에는 8%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官需의존형 경제에서 民需의존형 경제로 전환됨

< 일본의 GDP, 공공투자, 민간 소비 변화 >

구 분	GDP 성장률	공공투자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	
2001년	1/4분기	2.5%	0.9%	4.7%
	2/4분기	1.0%	-6.3%	6.9%
	3/4분기	-0.2%	-4.1%	2.6%
	4/4분기	-1.6%	-3.5%	-8.8%
2002년	1/4분기	-2.2%	-6.5%	-7.8%
	2/4분기	-0.3%	-3.8%	-8.1%
	3/4분기	1.3%	-4.6%	-6.5%
	4/4분기	1.7%	-4.2%	2.1%
2003년	1/4분기	1.8%	-8.1%	2.0%
	2/4분기	1.7%	-10.4%	7.4%
	3/4분기	1.5%	-12.1%	4.6%
	4/4분기	2.1%	-12.7%	10.5%
2004년	1/4분기	3.7%	-3.1%	6.0%
	2/4분기	2.8%	-11.8%	6.3%
	3/4분기	2.4%	-12.0%	6.7%
	4/4분기	0.4%	-9.4%	0.4%
2005년	1/4분기	1.4%	-16.3%	7.8%
	2/4분기	2.6%	-3.4%	7.5%
	3/4분기	2.9%	0.8%	8.0%

자료: 일본 내각부.

- (정부 구조개혁) 한편 공무원, 특수법인 등을 통해 對정부 구조개혁을 달성함과 동시에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사회보장 지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공무원 개혁)¹⁾ 코이즈미 내각의 공무원 개혁의 중심은 공무원 총인건비 개혁, 공무원 제도 개혁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추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총인건비 개혁: 2011년까지 우정공사 직원 26만 명(관련사 포함 40만 명)의 민간인화, 우정공사 이외의 국가 공무원(현재 약68.7만 명) 5% 이상 삭감, 지방공무원 4.6% 이상 삭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행 GDP 대비 공무원 총인건비를 1/2 수준까지 낮출 계획임²⁾
 - 공무원 제도 개혁: 일본 인사원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조기퇴직제도 개혁, 과도한 연공서열주의 개선 및 능력등급제 도입, 커리어 시스템 제도 등 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질 및 서비스 향상, 개혁 추진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총인건비 개혁의 구체 대상 및 내용 >

1. 중앙 정부 공무원 인건비 규모
 - 일본 정부의 2005년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중앙 정부 공무원 인건비(국회 및 재판소 직원, 자위대 포함, 국회의원 제외)는 총 4.7조 엔으로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음
2. 지방공무원 인건비 규모
 - 2002년 지방 보통 회계 결산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총인건비(교원, 경찰 및 일반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는 26.4조 엔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음
3. 공무원 특수근무 수당
 - 공무원 특수근무 수당은 고소 작업 수당, 항공 수당, 유해물 취급 수당 등 30종류에 달함

자료: 日本 內閣府, ‘公務員の總人件費削減について’, 2005年 2月 28日.

1) 日本 內閣府, ‘公務員制度改革に関する報告の骨子’; 日本 內閣府, 經濟諮問會議, ‘總人件費改革基本指針’ 2005年 11月 14日.

2) 日本 內閣府 經濟財政諮問會議, ‘公務員の總人件費の削減に向けて’, 2005年 2月 28日.

- (특수법인 개혁) 일본 정부는 공무원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행정에 관한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대폭 정리하고 있음
 - 특수법인 등 정리 및 합리화 목표³⁾: 현행 163개 특수법인 등⁴⁾ 가운데 45개 공제조합을 제외한 118개 법인에서 폐지 17개 법인, 민영화 45개 법인, 38개 법인의 36개 독립행정법인화, 기타 18개 법인 등 특수법인 등의 정리 및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정책금융 개혁⁵⁾: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05년 11월 29일 ‘정책금융 개혁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8개 정부계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검토·추진하고 있음
 - 성과: 2002년부터 실시된 특수법인 등에 대한 개혁의 성과를 보면 2005년 말까지 16개 법인 폐지, 36개 법인 민영화, 39개 법인 독립행정법인화 등을 통해, 총 재정 지출액 가운데 1.5조 엔을 삭감함

< 일본의 정책금융 개혁 방침 >

1.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국책 상 중요한 해외자원 확보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금융, 엔 차관의 3개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철폐함을 기본 방침으로 함
2. 2020년까지 GDP 대비 대출 잔고 50% 삭감(현재 정책금융의 규모는 약 90조 엔으로 45조 엔 규모까지 축소)하고, 신규 재정 부담을 지지 않으며, 민영화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꾀함
3. 민간금융기관 활용을 포함하여 재해, 테러, 금융 위기 등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함
4.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정책금융기관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혁을 단행함

자료: 日本 內閣府 經濟財政諮問會議, ‘政策金融改革の基本方針’, 2005年 11月 29日.

3) 일본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 계획’에 따르면 일본의 특수법인 등의 개혁은 조직 형태에 따른 임원 급여 및 퇴직금의 적정화, 정보 공개 철저 등 제도면에서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日本 特殊法人等改革推進本部, ‘特殊法人等整理合理化計画’ 2001年 12月 18日.

4) 일본의 특수법인 등 개혁 추진 본부가 개혁하고자 하는 특수법인 등은 일본도로공단 등 11개 특수법인, 노동복지사업단 등 12개 사업단, 국민생활금융공고 등 6개 공고, 국제협력은행 등 2개 은행, 상공조합중앙공고, 帝都高速度交通營團, 전원개발주식회사 등 13개 특수회사, 일본육영회 등 기타 법인, 일본중앙경마회 등 5개 공영경기법인, 일본은행 등 29개 인가법인, 일본상공회의소 등 5개 사업자단체, 일본변리사업 등 7개 士業단체, 중의원공제조합 등 45개 공제조합이 대상임. 日本 特殊法人等改革推進本部, 동상서.

5) 日本 內閣府 經濟財政諮問會議 ‘政策金融改革の基本方針’, 2005年 11月 29日.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제고) 국고보조부담금 개혁,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 지방교부세 개혁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고보조부담금 개혁: 2005년 및 2006년 예산에서 국고보조부담금 항목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3조 엔 정도 재정 지출 규모 축소
 -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에 의한 3조 엔 규모의 재정 지출 규모 축소분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개혁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함으로써 충당시킴
 - 지방교부세 개혁: 2010년대 초반까지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지방재정계획의 합리화 및 투명화 추진
 - 市町村 합병 추진: 1999년 3월말 현재 3,232개 市町村의 합병을 통해 2006년 3월말에는 1,822개 市町村으로 축소시킴으로써,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

- (규제 개혁) 의료, 교육, 복지 및 보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官業(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의 민간 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 규제 개혁을 통해 소비자 효용을 창출하고 있음
 - (官業(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의 민간 개방) ‘新公共經營(NPM, New Public Management)’의 한 형태인 ‘시장화 테스트(Market Testing)’를 도입하여 민간 활력 활용을 통한 정부 재정 지출 축소를 꾀함
 - 시장화 테스트 도입 배경: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면서 비용 또한 官보다 싸고 충분히 민간에서 운용할 수 있다면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축소시키고자 함
 - 도입 상황: 구인 개척 사업의 민간 개방, Ability Garden(평생 직업능력 개발 촉진 센터)의 직업 훈련의 민간 개방 등 헬로 워크(공공직업안정소) 관련 官業(공공기관의 업무 영역), 국민연금보험료 수납 사업 및 연금 전화 상담 센터 사업 등 사회보험청 관련 官業(공공기관의 업무 영역) 등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모델 사업을 전개함

< 시장화 테스트의 개념과 효과 >

1. 시장화 테스트 개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해 官業(공공기관의 업무 영역)과 民業(민간의 업무 영역) 간 투명·중립·공정한 경쟁을 통해 질과 가격 양면에서 보다 뛰어난 경영 주체가 해당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官民경쟁입찰제도'를 말함

2. 시장화 테스트의 효과

-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중심으로 폭 넓게 실시되고 있으며, 큰 성과를 올리고 있음(美原, 2005)
- 시장화 테스트의 효과는 첫째, 경쟁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 둘째,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로 새로운 민간 수요, 고용 등의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셋째, 과세가 면제되고 보조금에 의해 수행되는 관업이나 비영리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분야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세출 삭감에 공헌함

자료: 八代尙宏, '市場かテストによる公共部門の効率化', 「經濟セミナー」, 日本評論社, 2006年 1月号.

- (규제 개혁을 통한 소비자 효용 창출)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규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창출하고 있음
 - 대규모 규제 개혁 단행: 일본 내각부에 의하면 2005년 3월 현재 1,131개 항목에 이르는 대규모 규제 개혁을 단행함
 - 소비자 효용: 1990년대 이후 단행된 규제 개혁에 의한 소비자 효용의 합계는 2002년 기준 연간 약 14조 3천억 엔으로 국민 1인당 11만 엔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⁶⁾

3. 시사점

-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 필요)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 및 이를 위한 중장기 재정 확보 전략 수립 시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 단계가 다르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비전 수립이 필요함
- (일본의 전략 기본 방향) 일본의 경우 일본의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은 약한 재정 기반을 고려한 상태에서 정부 개혁과 민간 활력 활용이라는 시장원리를 중시한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재정 확보 전략을 수립함

6) 日本 内閣府, 'ここまで進んだ小泉改革-經濟構造改革の成果と進歩状況', 2005年 8月.

- (국가 경제 발전 단계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 전략 수립) 한국 경제는 구미보다 경제 성장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도 성장 속도가 느려 보다 적극적인 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면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선진 경제로의 발전 이념 정립) 한국은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주의를 선진 경제로의 발전 이념으로 정립해야 함
- (정부 혁신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부는 적극적인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과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전략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험)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련의 개혁들이 실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무원 개혁,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官業 개방 등 적극적인 정부 혁신이 있었음
- (정부 솔선수범을 통한 국민 참여 유도) 작은 정부 추진을 통해 정부의 비대화 방지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등 솔선수범의 자세를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 (官業(공공기관의 업무 영역) 개혁 등을 통한 민간 활력 활용) 정부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반드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新公共經營’을 추진하여 민간 활력을 활용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이 보다 뛰어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규제 개혁을 통한 개혁 비용 상쇄) 일본은 대규모 규제 개혁을 통해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개혁 비용을 상쇄시키고 있어, 한국의 경우도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개혁을 통한 소비자 효용 창출로 국민연금 등 각종 제도에 따르는 구조조정 비용을 상쇄해 나가야 할 것임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